

# 더민주 전대·조직개편 ‘통합지도부’ 구성할까

### “계파 패권주의 극복해야 대선정국서 야권 공조”

#### 지역위원장 공모 시작…호남위원장 선임 촉박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의 조직 개편과 전당대회에 야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민주가 계파 패권주의를 극복해야 야권이 함께 만드는 정권 교체의 길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가 1일 전국 지역위원장 공모를 시작했다. 지역 조직을 과감하게 정비, 내년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각 계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당내 비주류 진영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분위기를 일신하고 계파 색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친노·친문 등 당내 주류 성향의 지역위원장을 일정 정도 숨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

다. 그렇지 않아도 ‘도로 문제인 당’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원외 지역위원장까지 주류 인사들이 차지하게 되면 대선을 앞두고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혁신의 의미도 퇴색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징적으로 호남과 영남 지역의 원외 위원장 선임에는 이러한 정치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반영하듯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지난달 16일 열린 첫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과거 ‘누구의 사람이나 봐줘야 한다’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야 한다”며 원외 지역위원장 물갈이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내 주류세력에서는 ‘인위적 교체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철저한 인물 위주로 조직 개편이 진행돼야 하며 정치적 고려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8월 27일 열린 예정인 더민주의 전대도 야권의 관심사다. 야권 통합의 상징성을 가진 인사들이 대표 및 지도부에 선출돼야 내년 대선에서 정권 창출을 위해 야권의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친노·친문 진영의 색채가 진한 인사들로 지도부가 구성될 경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과의 공조 등 야권의 역량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모 중진 의원은 이날 “더민주의 원내대표 경선 결과도 친노·친문·86 그룹의 합작품으로 보고 있다”이라며 “더민주가 계파주의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선 정국에서 국민의당과의 공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선 정국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던, 연립정부에 합의를 하든지 간에

민심이 더민주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며 “더민주가 문제인 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후보단일화도, 연립정부도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민주 내부 역학구도를 고려할 때, 계파 색채를 지울 수 있는 지도부가 출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문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후보군들은 벌써부터 친노·친문 진영과의 물 밑 접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친노·친문의 노골적 지원은 호남의 반발 등이 불가피,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어 조심스레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며 “당권 주자들에게는 대선을 앞두고 통합의 메시지 제시가 상당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더민주 지방정부위원장에 박영선

### 당·지자체 정책협의…공정언론특위도 설치

더불어민주당은 1일 당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박영선 의원을 임명했다.

박 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아 당과 지방자치단체가 활발한 정책협의를 이끈다. 당내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한 네트워크·디지털 전략을 총괄하고 누리꾼들과의 소통 활성화를 책임지는 디지털소통본부장에는 최명길 의원을 선임했다.

이와 함께 더민주가 당내 공정언론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특위 활동기반은 연말까지이며, 원 구성 협상 이후 미래창조과학부·통신위원회와 더민주 간



사를 맡는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겸하기로 했다. 특위 총괄 간사에는 김성수 의원이 임명됐으며, 권미혁·최명길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한편, 박영선 의원은 20대 국회 1호의 원외구단체로 등록된 ‘한국적 제3의길’의 대표도 맡게 됐다.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명맥을 이 모임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패러다임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여야 “경유값 인상 안돼” 한목소리

### 정부 미세먼지 대책 제동…당정, 오늘 대책회의

정부가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으로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이나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올리는 방법 등을 검토하자 여야 정치권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유 가격 인상이 ‘제2의 담뱃값 인상’이란 ‘서민 증세’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일 기자들을 만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경유값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유값을 올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휘발유 값을 내리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유는 화물 트럭, 영세 자영업자, 3040 젊은 층들이 애용하는 차들에 (사용된다). 서민들의 부

담을 올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터무니없는 발상이라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도 경유값 인상 검토에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경유 소비축진은 정부가 한 것이다. 화물차에 버스 수준 보조금까지 주면서 경유 차량 사용을 촉진했다가 이제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니까 경유가격을 인상한다는 안일한 대책만 가진 정부”라며 “국민이 과연 믿고 건강을 맡길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민주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미세먼지와 관련한 당정협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박지경기자 jkpark@

# 안철수 “국민의당 원구성 때까지 세비 안받겠다” 논란

### 더민주 “일 안하는 국회로 비쳐”

### 새누리 “협상판 깬 이유 밝혀야”

국민의당이 1일 20대 국회가 예정에 맞춰 개원하지 못하면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밝히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는 더욱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의 정상적 출발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일하는 국회는 일하는 정부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국회의 공백은 국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공백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세비반납이 오히려 ‘일 안 하는 국회’ 프레임이 만들어 여론이 등 돌리게 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세비로 시비 거는 게 제일 유치하다고 본다”며 “전형적인 반(反)정치 논리다. 우리가 월급에 연연하는 것도 아닌데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말하면 남북대화가 1년치 안 이뤄지고 있으니 통일부 장관은 1년치 월급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허가 필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허가 신청과 관련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원구성도 있지만 동네 가서 민원 듣고 주민도 만나고 토론회도 하는데 너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며 “지금 그런(세비 반납) 여론이 있긴 한데 ‘무노동 무임금’ 프레임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원구성을 위해 협상도 하고 민생TF도 일하고, 법도 준비하고 있다”

며 “오히려 세비 반납으로 ‘놀고먹는 국회’, ‘일 안 하는 의원’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잘 되고 있던 원 구성 협상을 어제(5월 31일)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며 협상판을 깬다”면서 “야당이 잘 진행 중이었던 원(院) 구성 협상판을 왜 깨

뜨렸는지부터 답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다만, 세비 반납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앞서 19대 국회 때도 새누리당이 세비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 당시 의원 총회를 거쳐 결정했었다”면서 “이는 원내지도부가 바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의 총의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새누리 ‘복당’ 다시 수면위로

### 정진석 ‘원구성 전 불가’ 방침에도 복당 요구 갑론을박

제 20대 국회(원(院))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그간 잠잠하던 새누리당의 탈당자 복당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이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 전 복당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원내대표가 이 같은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은 일종의 ‘꼼수’를 통해 국회의장직을 차지하려 한다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그러면서 “복당 문제는 원내(지도부) 소관인 아니라 혁신비대위의 소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원내대표의 ‘원구성 협

상 전 복당은 없다’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당내 복당 논란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내대책을 총괄하는 원내지도부 내부에서는 20대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복당이 필요하며 일괄 복당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의 위원장 배분 뿐만 아니라 상임위 정수 조정을 위한 대야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순차 복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비박(비박근혜)계 재선 하태경 의원은 “전당대회 개최 전에 순차 복당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 **축**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오픈**

Self MG 서양새마을금고

**모집**

**주유 외상거래 고객**

-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 후 결제 (월1회)
- 차량별 주유카드 제공 (거래투명성)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차량별 주유 확인 가능 서비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대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40  
문의 | (062) 720-2872